

#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2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윤준병 · 이학영  
김주영 · 한민수 · 김남근  
김태년 · 윤종균 · 안호영  
김영환 · 맹성규 · 이용우  
박균택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·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,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

있습니다.

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.

### 주요내용

- 가.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(안 제11조제5항).
- 나.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.
- 다.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).

##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

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예산 집행에 관한 기록물은 「감사원법」 제22조 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은”을 “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2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3. ~ 8. (생략)  ③ ~ ⑨ (생략) 제11조(이관) ① ~ ④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	제5조(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</u> <u>4. ~ 9. (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</u>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이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</u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</p> <p>① <u>대통령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(이하 “대통령지정기록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(이하 “보호기간”이라 한다)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<u>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예산집행에 관한 기록물은 「감사원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</p> <p>① <u>대통령</u>은 <u>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